

# 총선승리, 축배는 아직 이르다

의정단상

이명노  
광주시의원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175 대 108,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누군가는 보름 남짓, 누군가는 2년가량, 누군가는 일생을 걸고 노력한 시간의 성적표를 확인했다. 당선된 후보들에게 진심을 담은 축하를, 낙선한 후보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또한 선거에 일상을 양보하고 땀 흘려 땀 각 캠프 운동원 및 지지자를 비롯해,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고생한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여러 진단은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부터 차근차근 나올 것이니 차치해 두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해보고자 한다.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누구나 알고 있듯 “정권 심판”이었다. 국민을 우롱하고 해진 정부, 더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만행을 보인 2년간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국민의 무기인 투표로 심판하는 선거였다. 지역구인 서구(을) 캠프의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께 외친 기억을 떠올린다.

“내가 얼마나 관찮은 사람인지,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마땅할 선거가 그런 호소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현 정부가 얼마나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뿐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새로운 대리인을 선출하는 축제여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축제마저 앗아간 저정권이라면 우리도 심판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심판의 여론과 국민은 승리했다. 하지만 하루빨리 가장 큰 숙제들을 처리하고 각자 지역구 대리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4년 뒤에 역풍으로 다가올 새로운 심판론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수많은 국민이 한목소리로 외친 심판을 승리의 기쁨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먼저,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이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상병 사건 등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사건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의대증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투표장에 입장도 못한 강력한 무기, ‘대포’로 대유되는 물가와 민생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약속이다. 허점투성으로 지방을 굶긴 부자 감세와 R&D 예산 삭감 그리고 전세사기 등 우리 민주당이 지지를 호소한 명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은 변화해야 할 것들이다. 김건희 일가의 방향으로 변경된 양평고속도로 및 각종 개발 특혜 의혹,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혐의 등 특혜와 비위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해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보다 더 청렴하고 보다 더 떳떳한 국회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대는 또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올 게 뻔하

다.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다. 경선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당원과 범야권을 포용해야 한다. 모든 과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범야권과는 합당만이 능사가 아니며 끈끈한 연대로 한목소리를 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이상향인 200석을 만들지 못한 만큼 당 내외로 모든 세력과 지지층이 합심해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보수가 108석이라고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단정을 지을 수만은 없다. 여러 후보들이 정권 조기 종식을 외쳤던 선거지만 방법론적인 설득력은 부족했다. 결과물로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숙제가 있다. 한 국민의힘 후보가 구의원 폐지라는 공약을 걸기도 했던 치욕스러운 선거였다. 지방선거로부터 2년 정도 지나는 시점, 이제 모든 지방의회가 새로운 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 앞선 중차대한 과업의 해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행실부터 더 완곡한 모습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의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소위 말하는 줄서기는 이제 끝났다.

188석의 범야권 당선자를 만들어 준 국민의 선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너진 민생, 무너진 민주주의,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지역발전을 이뤄달라는 책임을 준 결과다. 그럼에도 접전이 많았다는 것과 빼앗긴 지역구가 주는 씁쓸함은 우리 민주당이 축배를 들기에 이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섭섭하지 않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어서 일하러 가야 한다.

## 社說

### 22대 국회 5·18 정신 헌법 수록 이뤄져야

#### 시민단체 헌법전문 기록 촉구

광주·전남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을 향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커지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8석, 전남 10석을 모두 차지했다. 지역민들은 민주당 소속의 원들이 지역 수원을 반드시 완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5·18 단체에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 미완의 과제를 남긴 진상규명에도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주문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이 공식화된 것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세우면서다.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20일 광주를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나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전문에 기록될 것이며 발표명령자 등은 폐된 진상은 철저히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또 “5·18 관련 자료 폐기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어떤 시도도 원천 금지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이후 국론 갈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돼 왔다.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이번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의 요구다. 민주당 당선인 8명은 첫 행보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들이 방명록에 ‘오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민들이 보내준 지지·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5·18은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공인받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3·1만세 운동, 4·19혁명과 함께 5·18을 국가 이념과 기본 가치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더 이상 왜곡과 폄훼되지 않고 모두가 지키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길 바란다.

### 초저출산 시대, 교대 정원감축 당연하다

#### 교육부 내년 12% 감축 결정

정부가 내년 교육대와 국립 초등학교와 정원을 12% 줄이기로 했다. 14년 만의 일이다.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교육부의 이번 정원 감축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현직 교사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대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대와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12곳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12% 감축하는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9명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입학정원은 현재 3808명에서 2025학년도 3351명으로 457명으로 12% 줄어든다. 이화여대는 사립대인데다 다른 대학과 달리 정원 규모 자체가 적어 감축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원 수급 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고

질적인 병폐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학령인구가 30%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초·중등 교사는 20% 이상 늘어나면서 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하고도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는 여초구니 없는 사태가 일상이 됐다. 지난해 광주에서 치러진 초등 임용시험에서 35명이 응시해 17%인 단 6명이 합격하고, 그나마 많은 인원이 발령을 받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탓에 인원을 줄여도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늦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교원의 수급구조를 바꾸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당연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1980년 566만 여명이던 초등학교생은 지난해 260만 명으로 급감했다. 미래의 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대 정원 감축과 혁신적 교원 관리가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제 때 발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인 반면 과잉 교육의 폐해다. 공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혁신적 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 9일(현지시간) 태국 아유타야에서 송끄란 축제(물 축제)를 앞두고 사람들이 코끼리에게 물을 끼얹고 있다. 태국의 전통 새해인 송끄란 축제는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며, 이 기간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새해 인사를 전한다.

아유타야=신화/뉴시스

#### 서석대

1919년 4월 10일 오전 10시.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조선의 13대 대표단이 모였다. 참여 인사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도산 안창호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사상가 조소앙 등 모두 29명. 한 달여 전 3·1독립운동의 파장을 주시해 왔던 이들은 이날 모임을 임시의정원으로 명명했고,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을 의장에 선임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 이동녕 의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 등 10개 항의 임시헌장을 채택한 정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시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이었다.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대한제국의 주권을 계승한 임정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민족을 규합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도 치열하게 전개했다.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의 역사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뀐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도 해방 후 역사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 역사학자 한시준은 이런 임정을 두고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백성에서 국민으로 민족사를 바꾼 반만년 역사의 1대 사건’으로 평가했다. (한시준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약도 눈부셨다. 한국 독립운동의 정치적 중심지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보여줬고 광복군을 조직해 일본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도 펼쳤다. 특히 임정 산하 광복군은 미얀마 등지에서 연합군과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등 항일 공동작전을 활발히 수행했다. 한민애국단과 조선의용대 등의 무장투쟁과 함께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의 의거도 동아시아의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독립을 위한 국민의식 고취와 계몽 활동도 임정이 거둔 성과다.

#### 착잡한 임정 105주년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지 꼭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22대 국회를 이끌어 갈 300명의 국회의원도 이날 모두 확정됐다. 임시정부를 세웠던 독립투사와 국회의원들은 활동한 시기와 역할은 다르지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임정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동녕 선생은 생전 ‘나라를 위한 일에 죽음을 어찌 두려워 하랴’고 했다. 죽음을 무릅 쓴 리더는 기적을 만든다.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는 과연 죽음을 무릅 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임정 수립 105주년을 맞는 오늘, 성난 민심이 만들어낸 22대 국회의 탄생을 지켜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